정책참고자료

2017-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2017년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안전혁신 성과 확산하는 해! ——— 4

2 국민권익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에 기여 ——— 21

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26

4 교육부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 36

5 미래창조과학부

UHD 방송 전국 확산을 위한 DTV대역 채널 재배치 추진
-울산·강원권(원주·평창) 세부 추진계획 및 시청자 지원대책- ——— 42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행자부·국토부·조직위·강원도 등,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 46

7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부처 합동 고병원성 AI 매몰지 현장점검 ——— 54

8 환경부

환경부, 모든 롯데마트 매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 56

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크게 개선 ——— 62

10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프로그램과 함께 설 명절 즐겨요!” ——— 66

11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67

12 해양수산부

설 명절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 76

1 국민안전처

2017년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안전혁신 성과 확산하는 해!

"지진, AI 등 국민불안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 " (2p)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및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도입"4p)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처"(6p)
"2017년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7p)
"2017년은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 실천적 안전문화 운동 전개"(10p)

<총 괄>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7.1.11(수), 2017년을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2017년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1]를 조성,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성과 확산

○ 국민안전처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재난안전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1) 생물적 요소(사람, 동물)와 비생물적 요소(물, 공기, 햇빛)를 포함하는 생태계 개념을 차용, 재난안전관리 주체와 인프라, 법제도, 문화 등을 안전관련 생태계로 보고, 이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때 국민안전이 확보된다는 의미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과제]

1 범정부가 협업과 소통으로 국민안심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진대책 추진과 AI 대응체계 정비로 국민불안 해소...>

□ 우선,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 발생이 연례화 되어 가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발생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초기대응 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과 취약분야 안전대책 마련 >

□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최근 국제적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외국인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렌터카 등 신종 레저·여가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은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

< 평가강화를 통한 총괄조정 실효성 확보 >

□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을 지난해 36개에서 74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관의 평가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체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범정부 재난예방·대비 역량 강화 >

□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을 내실화한다.

○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9만여 개소에서 33만 여개소로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에 대해서 시기적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점검하고, 내부자 공익신고 유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 1월(지하철), 2월(댐), 3월(여객선), 4월(유원시설) 등

□ 안전한국훈련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 먼저, 훈련참가 모든 기관들은 현장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훈련은 기관장이 지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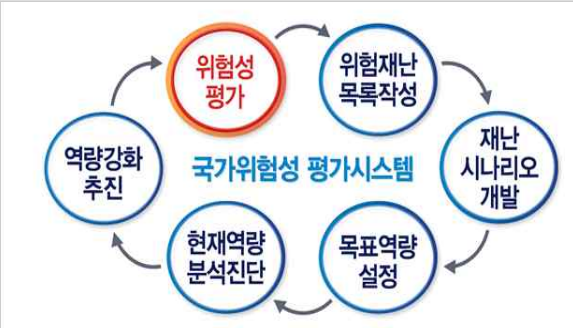
○ 또한, '어린이 안전한국훈련'도 확대하여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국가위험성평가제도와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도입 >

□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위험에 미리 대비한다.

○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별 목표역량과 현재의 역량을 비교, 기관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험성 평가시스템>



○ 또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테러나 재난발생 시에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무를 제도화한다.

2 현장에서 하나 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육상 어디서나 골든타임이 확보되도록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호남 및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의 전문 인력(18명)을 보강하고, 탐색장비운반차, 헬기 등 첨단 대형장비를 중점 보강한다.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여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달성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 소방시설 의무화>

○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한다.

○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금년 1.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 또한,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년 4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금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 불법조업 꼼짝 마! >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친다.

○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운영과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공용화기 사용과 전술개발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 특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17.3월)하여, 해수부·해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조업으로 몰수 판결된 외국어선을 전부 폐선 조치토록 ('16.11.23 시행)하고,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상향('16.12.27 공포·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 아울러, 중국과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자체노력을 지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 재난망 사업 본격 추진 등 재난인프라 구축 >

□ 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 현장대응기관간의 단일통신망 사용으로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15.11.~'16.6.)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안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 앱('17.4월) 개발로 현장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자원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 아울러,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전면 시행함에 따라 그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전국 상황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고이관·공동대응에 있어서 문제 발생이나 시스템 장애시 즉각 대응하는 한편,

- 신고번호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특수번호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재난사고 발생시 21개 기관에 자동적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현장대응요원의 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3 지방자치단체 역량은 지원하고, 책임성은 높이겠습니다.

□ 지자체의 재정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재난안전특교세*는 신속한 재해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금년에 소방장비노후율이 0%가 됨에 따라소방안전교부세**도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용도를 다변화한다.

* 재난안전특교세 : 2016년(5,416억 원), 2017년(5,811억 원)

** 소방안전교부세 : 2016년(4,147억 원), 2017년(4,588억 원)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이 2.4조 원에 이름에 따라 그동안의 적립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예방사업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을 재난안전특교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공개, 평가, 감찰을 통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

□ 다양한 정책수단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먼저,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전국서비스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자체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 7대 분야의 지역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지역안전지수를 해마다 공개한다.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수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통계구축과 검증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공개한다.

- 지역안전지수 중·하위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요인 정밀진단,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수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강화한다.

○ 지역안전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 금년에는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등 4대 분야를 추가한 총 8대 분야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 공개('17.12.)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해 지도의 모바일앱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안전지도의 디자인도 개선한다.

□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도 확보한다.

○ 먼저,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시·도까지만 실시하던 재난관리평가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평가결과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여 공개한다.

○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지금까지 재해예방사업이 지역발전, 지역의 안전도 향상 기여 등에 대한 분석시스템이 없었다.

-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200억 이상 완료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을 분석,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을 피해유형별, 재난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시도별 재난안전투자 비교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피해유형별 : 지진, 풍수해, 가뭄, 교통재난 등 / 재난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감찰 활동으로 적극적 재난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홀한 공무원은 문책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간다.

< 성과 중심의 선순환 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

□ 방재성능목표, 자연재해저감계획, 재해예방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해예방사업체계를 구축한다.

○ 먼저, 지역별 강수현황 등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한다.

※ 예) 울산광역시 방재성능목표 75㎜/h
⇒ 태풍 차바시 131.5㎜/h

○ 또한, 풍수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대설·지진·가뭄 등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4 안전문화운동과 안전관리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7년은 안전문화운동 도약의 원년! >

□ 금년에는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금년은 안전문화 도약기에 접어드는 첫해로서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이 4대 주체가 되어 점검·단속, 교육, 신고에 기반한 자발적인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를 선정, 시범참여기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메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 '17년에는 세종시 및 대전시와 실천적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점검의 날에는 교육·신고를 병행하여 점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대대적 안전신문고 참여 홍보와 함께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교육법 제정('16.5.)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틀을 확실하게 다진다.

○ 또한, 안전체험관도 금년에는 4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 아울러, 안전교육 컨텐츠*도 지속 발굴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하고, 안전교육 통합포털도 구축한다.

* 기개발(300종), 17년(100종), 18년 이후(100종)

<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확대 >

□ 민간단체와 기업, 다중이용업소 등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민안전 민관협력 위원회를 시·군·구로 확대하여 풀뿌리안전문화 붐을 조성하고, 재난유형별 민간협력 선도단체*를 집중 육성, 안전문화 참여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간다.

* 자율방재단(59,723명), 의용소방대(95,124명), 해양구조대(3,216명)

○ 자원봉사센터 - 적십자사로 이원화된 재난자원봉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 CJ그룹 등 민간기업의 재난구호 인프라를 활용, 전국에 촘촘한 '재난구호물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훈련을 연2회 실시한다.

□ 장성요양원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등을 거울삼아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훈련컨설팅을 제공한다.

※ 위기상황매뉴얼 작성대상시설 총 2,758개소 전체 작성 완료('16.9.30 기준)

□ 아울러, 중소기업이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업을 통해 세금감면, 입찰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업무계획 추진상황 관리]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세부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안전이 확보되도록,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중앙,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에게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 '올해도 국민안전처는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어떤 환경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드린 과제 하나 하나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 1 2017년 핵심과제 요약

-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한다.
-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다하는 한편, 특히 금년 3월에 창설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활용 NLL해역의 불법조업을 근절, 해양주권의 수호한다.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반드시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노후율 제로화(0%)를 관리해 나간다.
-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본격 추진**, 올 안에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한다.
-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적 위험에 대한 기관별 현재 역량을 진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이 4대 주체가 되어, 교육, 신고, 점검 3대 분야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안전예산분석, 안전감찰 등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후 사업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참고2 2017 업무계획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044-205-****

세부 과제	부서	성명	연락처
Ⅰ.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 지진방재 종합대책	지진방재정책과	박근호 주무관	5182
• 감염병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사회재난대응과	한용렬 주무관	5256
• 취약계층분야 안전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 안전대책 - 장애인 안전대책 - 보행 안전대책	 안전개선과 안전개선과 안전개선과	 이경희 주무관 이경희 주무관 강연근 사무관	 4217 4217 4220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관리	안전기획과	이재업 사무관	4125
• 범정부 안전회의체 활성화	안전기획과	이선무 사무관	4120
• 재난관리평가 확대 및 결과 공개	예방총괄과	이소영 주무관	5123
• 재난안전사업 평가	안전사업조정과	김교원 사무관	4162
• 범정부 안전기준 통합관리	안전제도과	최강선 사무관	4144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과	허인수 사무관	4242
• 안전취약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개선과	박해영 소방령	4252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총괄과	김지민 사무관	5224
•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특수재난정책담당관	박승주 사무관	6111
• 특수재난 협업지수	특수재난정책담당관	박승주 사무관	6111
• 특수재난 교육기관 정책협의회	특수재난기획담당관	박용헌 주무관	6135
Ⅱ.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육상 특수구조대 인력 및 장비확충	기획협력과	유해욱 소방위	053-712-1005
• 국기기관 헬기 통합지휘 훈련	소방장비항공과	정광복 소방위	7378
• 국가중요시설 자체소방대 의무설치	방호조사과	조재용 소방경	7262
• 119구급서비스 품질 제고	119구급과	이승훈 소방경	7336
• 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설치	119구조과	허갑일 소방위	7320

세부 과제	부서	성명	연락처
◆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전제철 소방장	7385
◆ 화재저감 종합대책	소방제도과	김문하 소방경	7246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소방제도과	김문하 소방경	7246
◆ 국민생활 밀접시설 소방시설 설치	소방제도과	손용준 소방경	7247
◆ 비정형 해양사고 특화훈련	해양수색구조과	한충희 경위	2747
◆ 맞춤형 전문구조인력 양성	해양수색구조과	김세영 경감	2746
◆ VTS 신설 및 장비 현대화	해상교통관제과	박성용 주무관	2285
◆ 해양특수구조단 인프라 보강	해양장비기획과	김기산 경사	2371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해양경비과	위성휴 경위	2344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해양경비안전총괄과	권승범 경감	2458
◆ 해군 합동 성어기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비과	위성휴 경위	2641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재난자원관리과	김성일 주무관	5274
◆ 긴급신고전화 통합 사후관리	안전제도과	조성은 사무관	8337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본격 추진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이성정 사무관	0399
Ⅲ. 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방총괄과	박대성 주무관	5126
◆ 소방안전교부세	안전사업조정과	김재운 소방령	4161
◆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수	예방총괄과	황연규 주무관	5120
◆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예방총괄과	심숙연 사무관	5117
◆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훈련	재난관리총괄과	류해춘 주무관	5221
◆ 지자체 지진대응 전문 인력 확충	지진방재정책과	박하용 사무관	5183
◆ 지역안전지수 공개 및 컨설팅	안전기획과	이범준 사무관	4116
◆ 생활안전지도 확대 및 고도화	안전기획과	이숙희 주무관	4123
◆ 평가와 진단으로 지자체 책임성 강화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 안전예산분석 - 재해예방사업 투자분석 - 적극적인 안전감찰권 행사	예방총괄과 안전사업조정과 재난경감과 안전감찰관실	이소영 주무관 김재운 소방령 이상원 사무관 이종윤 사무관	5123 4161 5151 1342

세부 과제	부서	성명	연락처
• 지자체 주도의 재난대응 수습체계 확립	재난관리총괄과	정인성 주무관	5220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정례화	안전기획과	이선무 사무관	4120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기획과	이범준 서기관	4116
•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안전기획과	이범준 서기관	4116
• 자연재난저감계획	기후변화대책과	나경연 주무관	5166
• 재해예방사업(소하천 정비)	재난경감과	최무진 주무관	5158
• 재해예방사업(급경사지 정비)	재난경감과	김도희 주무관	5143
•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경감과	지경용 주무관	5152
• 재해예방사업(저수지,댐)	재난경감과	정순한 주무관	5147
• 재해예방사업(우수저류시설)	기후변화대책과	이효성 주무관	5162
• 지역별 차등화 된 방재성능 목표	기후변화대책과	나경연 주무관	5166
• 생활권 주변 교통인프라 투자	안전개선과	길영선 서기관	4219
• 지자체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안전과	최순환 사무관	4291
Ⅳ. 참여와 협력의 재난안전 역할 강화			
• 4대 주체 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	안전문화교육과	강진모 사무관	4272
•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	안전점검과	권치영 전문위원	4246
• 대대적 안전신문고 홍보	안전개선과	전웅용 사무관	4224
• 국민안전교육법	안전문화교육과	공병국 서기관	4271
• 국민안전기본(시행)계획	안전문화교육과	공병국 서기관	4271
•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문화교육과	손승남 사무관	4273
•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안전문화교육과	강진모 사무관	4272
• 안전교육 강사 양성 및 자격제도	안전문화교육과	공병국 서기관	4271
• 국민안전 민관협력위원회	민관협력담당관	김남석 주무관	6212

세부 과제	부서	성명	연락처
◆ 민간협력 선도단체(자율방재단)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 주무관	5239
◆ 민간협력 선도단체(의용소방대)	방호조사과	황창혁 소방위	7277
◆ 민간협력 선도단체(해양구조대)	해양수색구조과	오명용 경감	2247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지원담당관실	박지환 사무관	6231
◆ 민간 인프라 활용 재해구호 지원 체계 강화	재난구호과	안희정 주무관	5336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민관협력담당관실	김영환 사무관	6217
◆ 중소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기후변화대책과	박정운 주무관	5163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재난보험과	김수정 사무관	5352

2 국민권익위원회

<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업무보고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 에 기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및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추진 (행정심판법 개정)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 '내실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16년 54개→'17년 145개), 민생경제 등 서민 실생활 밀접 분야 민원분석 등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정부5년차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1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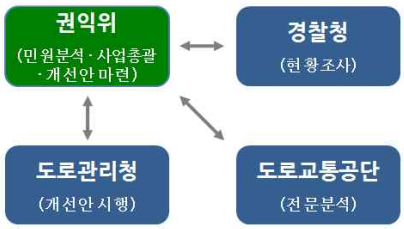
1. 민생고충 중점해소 및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고충을 중점 해소하고, 서민과 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

서민생활 보호	기업피해 구제
◦ 4대 보험공단의 과도한 통장압류 ◦ 공공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추심 등	◦ 공사·용역 등 부당한 공공계약 ◦ 지나친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 등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 기획조사로 터널·교량 등 특수시설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 교통안전 기획조사 협업체계 >



○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광역화하고,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는 등 이동신문고 운영도 활성화한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행정심판 대리 대상 청구인 및 사건, 세부 대리 절차, 국선대리인의 자격 등 규정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서 국선대리인제 운영 중

○ 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한다.

* 현장 증거조사 : '16년 228회 → '17년 260회

< 내실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3.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강화

□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

권익위	◆ 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제도적 보완 방안 연구
각 부처	◆ 업종별 피해분야 모니터링 및 대책 강구

○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자체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체계화

4. 부패행위 감시기능 확충 및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부정환수법」 제정('16.6월 국회제출)	◆ 허위청구 등에 대해 환수 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최대 30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규제심사 중)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화해권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한다.

○ 금년도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 기관-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 고위공직자·승진자 등 3천명 대상 집합교육 실시, 각급 공공기관 소속 20만여명 공직자 대상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청렴강사·교육 콘텐츠 적극 지원 등

○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의식을 함양하여 청렴풍토를 조성한다.

반부패 네트워크	• 반부패 민관 협의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확대(45개→50개)
기업	• 기업 반부패 가이드 보급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개선」5단계 전략 제시 - 청탁금지법 관련 사규 마련, 신고자 보호절차 확립 등
미래세대	• 초중고 윤리·도덕 교과서에 청렴콘텐츠 반영

<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

5. 국민 소통 시스템 개선 및 국민의 소리 심층 분석·활용

□ 정부대표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110콜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16년 54개→'17년 145개)

< 국민신문고 통합 지자체 수 >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전화를 110콜센터와 연계 또는 통합한다.

○ 국조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활용한다.

○ 민생경제·소상공인 등 서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민원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최근 4년간 민원이 대폭 증가한 분야를 중점 분석,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한다.

6. 권익구제 결정 사후관리 강화

□ 권익위의 권고나 재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위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심판 재결 이행력 확보	• 간접강제제도 도입 추진(행정심판법 개정안 '16.8월 국회제출) -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명령
제도개선·고충민원 권고 실효성 제고	• '16년 구축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 • 고충민원 주요 불수용 기관 대상 '고충민원 전략회의' 운영 • 권고 미 이행 시, 언론 공표 확대와 국회 제안 등을 통해 이행 독려

□ 권익위는 2017년 주요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 」 수립·발표 -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 **각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관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

□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하여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및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계약관련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함**

○ 또한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창업도 촉진함**

○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과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확산**시킬 계획임

* 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IT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

※ 사업고용협동조합은 현재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16년 165개의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있음

□ **자금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

○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1월 10일(화) 14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4대 핵심전략) ① 자생력 제고 ② 고용 친화적분야 확대 ③ 네트워크 강화 ④ 인식개선**
- **(11대 정책과제) ① 판로개척지원 ② 자금조달 경로확대 ③ 내부 역량 강화 ④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⑤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⑥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⑦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여건 조성 ⑧민관 파트너십 강화 ⑨ 협동조합 관리체계 효율화 ⑩ 대국민 홍보강화 ⑪ 미래세대의 교육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 그 간의 주요성과 및 문제점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월)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13.12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평균종사자('13년 7.1→'15년 8.2명), 평균이직률(협동조합 4.8%, 영리회사 22.3%)

** 협동조합 중 49%가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물품 및 현금 기부 등 수행

※ <협동조합 대표사례> ☞ 첨부3

① **동네빵네협동조합** : 13개 동네빵집이 조합원으로 구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판매전략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응

② **한국택시협동조합** :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 근무일수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과 급여수준 향상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

③ **서대문부모협동조합** : 부모들이 공동육아 방식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④ **성북신나협동조합** : 청년들이 지역 시니어들과 협동조합 구성, 지역 웹진, 웹지도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자체 청년 관련사업 수행

□ 정부도 '14년부터 시행된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에 따라,

○ 시장진입 **규제완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자금접근성 제고*****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 포함 등 25건의 시장 진입 개선

** '15년도 319개 공공기관에서 총 264억원의 우선구매

*** 보증 대상업종(5개→네거티브 방식) 및 특례보증 금액 확대(3→5천만원)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협업 등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촉진**시켜 왔음

□ 그러나 수익모델 미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 '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자금조달, 전문인력 양성, 연**

합회 활성화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와 비전, 4대 핵심전략 및 11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1 **(자생력 제고)**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컨설팅을 강화**하여 **내부역량 제고**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내실화***하고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상호거래 및 협력 촉진**

*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구매 실적 배점 상향, 구매종합정보망 구축 등

○ 한국에 적합한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 검토**

○ 컨설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공인자격제 도입, 대학 내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통해 전문가 육성

*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대상 온라인 상담 및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민간위탁 참여 확대 등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불공정 계약 등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 강화****

* 영세 자영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조합원으로 참여)로 설립

**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기술개발, 홍보, 공동장비 구입)을 패키지 지원

*** (사례) 소셜카페 협동조합(마을카페 8개), 와플대학 협동조합(49개)

○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직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유도

* 협동조합이 방송, 번역 등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맺어 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은 프리랜서가 납부한 수수료로 운영

** 신규 창업 및 기업 인수 시 필요한 자금 지원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 부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 여건을 조성**

○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도 확대**

3 **(네트워크 강화) 부처간 협업 및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관리체계를 효율화**

○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우선구매 등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

○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협동조합 성과지표 개발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

4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 긍정적 인식 확산**

○ SNS, 카드뉴스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교육 확대**

□ 최상목 차관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 협동조합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협동조합 대표조직과의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첨부1) 협동조합 개념 및 현황
(첨부2) 협동조합 우수사례

첨부1 협동조합 개념 및 현황

□ **(개념)**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공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신고)과 사회적협동조합(인가)으로 구분

<타법인과의 비교>

구분	주식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근거법률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이익증진		공 익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인가제

○ **(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설립현황)** 법 시행이후 **빠른 속도로 설립** ('16.12월말 기준 10,640개)

(단위: 개,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비중
일반협동조합	51	3,028	2,674	2,273	1,953	9,979	93.8
사회적협동조합	1	102	121	178	202	604	5.7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14	17	13	8	52	0.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	1	2	1	5	0.1
전 체	52	3,145	2,813	2,466	2,164	10,640	100

첨부2 **협동조합 우수사례**

1. 한국택시협동조합

□ **(설립)** 법정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15.7)

* 188명 조합원, 택시 76대 운영중이며('12.11) **포항, 경주, 대구** 등에서도 **설립**

□ **(의사결정) 조합원 대표**를 **선임**하여 근로계약서, 사고처리규정, 근로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

□ **(수익구조)** 사납금을 일 단위로 관리하는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수입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 택시회사의 경우 사납금 미달시 기사가 자비로 충당해야하나 택시협동조합은 월 단위 전액관리제를 통해서 기준금(사납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

□ **(가동률) 택시 1대당 기사 수를 2.4명**(일반 택시회사 1.3명)**으로 늘려 택시 가동률 제고**(평균 90% 내외로 일반택시(약 70%)보다 높음)

□ **(근무)** 일반 택시회사 대비 근무일수를 **1일 단축**(월 26일→25일)하고 **휴일 빈도를 조절***하여 장시간 운전에 대한 **충분한 휴식 보장**

* 주 5일 근무 후 1일 휴무(일반 택시회사는 6일 근무 후 1일 휴무)

□ **(급여)** 일반 택시회사의 **주주 이윤에 해당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기본급 인상** 및 **특별수당으로 지급**

○ **급여수준 향상** 및 **월급제 도입**으로 기사에게 **목돈을 지급**하여 적금가입 등 **자산축적이 가능**해지고 **신용 등급 향상** 등의 효과 발생

* 택시협동조합 평균 급여는 **250만원 수준**(일반 택시회사 평균 150만원)이며 초과 수입이 많을 경우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발생

□ **(성공요인)** 조합원인 택시기사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일반 택시회사 대비 소득을 높여 **직무만족도 제고**

○ **가동률 제고**에 따른 **특별수당** 및 **초과수입 지급**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는 다시 **생산성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형성**

⇒ 민주적 운영, 근무여건 개선, 급여 수준 향상 등으로 택시협동조합에 취업하고자 하는 기사 대폭 증가(현재 **약 500여명 가입 대기**)

2. 동네빵네협동조합

□ **(설립)** 서울시 은평구 및 서대문구 지역에 소재한 개인 제과업체가 협동조합을 구성('13.7.)

□ **(목적)** 공동 판매 전략으로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 대응 및 소상공인 경영난 돌파

○ 동네 빵집 간 협업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자재 구입, 제고관리 등 비용 부담 감소

□ **(사업내용)**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브랜드(동네빵네) 개발, 밀가루 등 원자재 공동구매, 생지 공동 판매, 공동 작업장 이용 등

○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특수빵 제작, 공동제품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원자재 공동구매로 원가 절감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개별 점포의 강점을 부각시켜 차별화된 공동 신제품 개발 등

3. 서대문부모 협동조합

□ **(구성)** 공동 육아에 관심 있는 서대문구 학부모 커뮤니티가 협동조합으로 발전

□ **(목적)**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와, '내 아이가 아닌, 마을의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목적

□ **(사업내용)** 육아 서비스의 소비자인 부모들이 조합원으로 운영주체가 되어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직접 결정하는 '콩세알 어린이집' 운영

○ 아이들에게 친환경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어린인집이 실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제공

○ 공동육아 방식과 운영 참여를 통해 기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불량 식품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4. 성북신나협동조합

□ **(구성)** 서울 혁신일자리 사업('13년)에 참여했던 졸업생 10명이 지역 시니어(8명)와 함께 참여하여 조합원 18명으로 협동조합 구성

○ 현재는 조합원 85명, 상근근로자 3명 고용중('16.12.)

□ **(목적)** 성북 지역의 문화・예술자원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 활성화 및 청년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지역 활성화)** 정릉동 지역 상인, 예술가 등 지역 이야기가 담긴 정릉동 웹진 '신나지' 발간, 지역 웹 지도

○ **(청년 생태계)** 성북지역 청년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수행, 지자체 청년 관련사업 위탁 수행 추진

5.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 **(구성)**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부모들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 및 특수교사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목적)** 중증장애인 직업개발과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 수행

□ **(사업내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초음파 회오리 에어 세차*(출장 세차) 서비스 제공

○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단순 반복 작업 공정*을 운영

○ 현재 근로자 8명중 발달 장애인 6명 고용('16.12. 기준)

○ 대전 지역의 시청, 교육청, 대학 등 공공 시설의 근로자 및 관용차, 일반 시민 등을 대상 서비스 제공

* 물 반 컵으로 세차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로, 공기를 이용해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연리지의 대표 기술

4 교육부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발표

❖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NEIS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및 돌봄체험기간 운영 등으로 수요자 편의 제고**

□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운영 계획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운영 내실화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오후·저녁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내실화**하여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1~2학년 중심 돌봄 교실에서는 외부강사와 교원이 **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안전**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지원하고,**
- 3학년 이상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서는 **자원봉사·교육기부 등 다양한 전담인력이 학생 출결을 관리**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독서·운동 등의 틈새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17년도에는 3~6학년 대상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

- **(장소)**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전용교실을 마련하여 개인 사물보관 장소 및 활동 공간으로 구성
- **(관리 인력)** 관리교사 및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 **(운영 방식)** 개인관리카드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귀가 등 철저한 학생 관리
- **(프로그램)**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연계형 틈새 프로그램*** 운영
  *주 2회 이상 전통놀이, 신체활동, 상담, 보드게임 등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 신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시도별 즉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수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돌봄교실당 정원 탄력적 조정, 대기학생 발생에 따른 겸용교실 등 추가 구축,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확대 지원, 돌봄협의체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아동센터 등 인근 돌봄기관과 연계

- 우선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실 200실을 신규로 증축하고, 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여 수용 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 시도 및 시군구 지역돌봄협의체(183개)와 권역별 협의회(949개)를 지원하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돌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를 흡수**토록 할 예정이다.

2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

○ 올해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http://www.neis.go.kr, '17.2월 개통)**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확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방문 등을 거쳐야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었다.

- **새로 도입되는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뿐만 아니라 출**

결 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의 확인도 가능하다.

○ 학부모의 선택을 돕고 수요 변동을 줄이면서 **새 학년 시작과 동시에 돌봄이 가능**하도록 2월 중 돌봄체험 기간이나 돌봄교실에 대한 집중 오리엔테이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학부모 수요 및 학교·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후돌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권장, 방학 등 휴업일 중 오전부터 운영 등** 돌봄교실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 중 1,700여실을 보수하고,**

- 시도교육(지원)청의 돌봄협의회를 중심으로 **돌봄 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놀이·안전*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예) 돌봄교실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분기별 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 안전교육 실시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활성화

○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간 방과후 돌봄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 내 우수 체험 프로그램 공유 및 대체인력풀 마련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급간식 준비, 저녁돌봄 안전관리** 등에 학부모, 퇴직교원,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올해에는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교실 수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돌봄교실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학부모 대상 '(가칭)우리 아이 돌봄교실을 자랑합니다' 공모전 실시

□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에 도입된 이래, **2016년 현재 5,998개 초등학교에서 11,920실, 초등학생 24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학부모의 95.7%*가 만족한다고 평하는 등 **가장 호평받는 교육정책으**

로 자리매김하였다.

※ 학부모 만족도 전수조사 결과 ('14년) 92.5% → ('15년) 94.8% → ('16년) 95.7%

○ 올해에도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고, 오후 돌봄 및 방학 등의 휴업일 중에는 탄력적 운영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전년대비 **약 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돌봄교실 1실당 연간 운영비 기준 단가 (백만원) : ('16년) 약 30 → ('17년) 약 40

□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학생은 따스한 보살핌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부
2. 2017년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 개요 1부

별첨1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시·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교수 (개)	교실수 (실)	이용학생수 (명)	학교수 (개)	교실수 (실)	이용학생수 (명)
서울	571	1,666	33,094	378	393	2,537
부산	303	585	11,773	180	223	1,788
대구	218	425	8,159	90	90	353
인천	246	538	11,168	172	255	1,297
광주	150	313	6,061	146	149	275
대전	147	366	7,737	117	172	1,078
울산	119	273	5,976	31	32	116
세종	37	98	1,821	10	10	111
경기	1,238	2,760	54,171	204	227	2,065
강원	357	617	10,449	11	11	178
충북	260	431	8,835	58	71	426
충남	416	706	14,394	14	15	150
전북	416	720	15,192	61	67	814
전남	422	621	13,035	71	71	770
경북	487	802	14,952	32	35	240
경남	506	818	17,689	25	26	290
제주	105	181	3,974	0	0	0
계	**5,998**	**11,920**	**238,480**	**1,600**	**1,847**	**12,488**

별첨2 2017년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 개요

구분	'16년		'17년
실당 운영비	• 오후 : 30백	⇨	• 오후 : 40백(10백만원 증액)
운영시간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연장·조정 운영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오전부터 운영 권장
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 프로그램	⇨	• 매일 1개 이상 무상프로그램 지속 강화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내 다양한 돌봄 인력을 활용하여 틈새 프로그램 운영
돌봄 전담사	• 원격교육 운영 지원 • 대체인력풀 구축 권장	⇨	• 시도별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돌봄전담사 대상 집합·원격교육 운영 및 대체인력풀 구축·활용
시설	• 시설 증축	⇨	• 시도의 수요 반영하여 시설 증축(약 200실) • 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 지원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구축 및 기존 노후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지역연계	• 학교 및 지역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 • 자원봉사 인력 등 활용	⇨	• 저녁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 연계체제 강화 • 대학생, 퇴직교원, 학부모 등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확대
홍보	•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SNS 등 활용	⇨	• 정책 소통 기회 마련, 돌봄교실 우수사례 확산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교원 대상 정책 인식 개선

5 미래창조과학부

UHD 방송 전국 확산을 위한 DTV대역 채널 재배치 추진
- 울산·강원권(원주·평창) 세부 추진계획 및 시청자 지원 대책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광역시권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17.12월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해, **울산·강원권**(원주·평창) **DTV대역 채널을 재배치**하고, **이에 따른 시청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 전국 확산**을 위해 **울산·강원권**은 **'17.6월, 전국 시·군**지역은 **'18년부터 '19년까지 순차적**으로 **DTV채널(470~698㎒)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18년말(5개 권역) : 제주, 강원(춘천), 경북, 충남, 충북,
'19년말(4개 권역) : 전남, 전북, 경남, 수도권(경계지역인 강원(춘천), 충남(천안·당진)에 공급하는 470~698㎒대역 UHD 주파수로 인한 전파혼신 우려시)

○ **울산**은 **'17.6.14일 14시, 강원권**은 **'17.6.21일 14시** 등 해당 권역 **9개 방송보조국** 대상으로 **채널 재배치**를 추진하고, 채널 재배치로 영향을 받는 **4개市(양산, 포항, 경주, 태백)·3개君(홍천, 평창, 단양) 지역의 약 2,800여 직접수신가구**는 TV리모컨으로 **채널 재설정(재검색)을 해야 TV 시청**을 할 수 있다.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TV시청 가능

□ 미래부는 채널 재배치로 영향을 받는 직수가구가 정상적으로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홍보·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뉴스보도, 자막방송,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스스로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을이장, 집배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널 재설정을 지원**하고,

○ 현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4번), 지원센터(부산・강릉)를 활용하여 시청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콜센터를 통한 설명만으로 **채널 재설정이 곤란한 기술적 취약계층과 공동주택 공시청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방송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문 기술지원반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지자체, 방송사, TV제조사 등이 참여하는「**DTV채널재설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채널 재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울산・강원권 DTV대역 채널재배치 시청자 지원 주요내용

붙임 울산·강원권 DTV대역 채널재배치 시청자 지원 주요내용

□ 채널재배치 및 재설정 대상 규모

o **(재배치 일정)** 민원 분산처리 등을 고려하여 **울산**은 **'17.6.14일 14시, 강원권**은 **'17.6.21일 14시** 등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추진

o **(채널재배치 규모)** 울산·강원지역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HD방송 보조국 中, **총 9개 보조국 채널 변경** 추진

< UHD 주파수 및 재배치 대상 보조국 >

구분	울산광역시	강원(원주·평창·동해) 지역
UHD 주파수	29, 39, 49번	19, 22, 34, 50번
재배치 보조국 (9개국)	KBS2: 하북(39→23번, 양산) EBS: 구룡포(29→36번, 포항) 감포(38→26번, 경주)	KBS1: 홍천(22→27번), 대화(34→24번) 두산(19→21번, 단양) MBC: 두산(22→39번, 단양) EBS: 대화(50→48번), 황지(50→29번)
재설정 대상 지역 (4개市, 3개君)	양산시: 상북면, 동면, 하북면 포항시: 구룡포읍 경주시: 감포읍	태백시: 소도동 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동면, 화촌면 평창군: 대화면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 **시청자 홍보**

o 뉴스보도,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의 자발적인 채널 재설정** 유도를 위한 **사전 홍보·교육에 주력**

o 채널 재설정 일정·방법 등을 **마을이장**(305명), **집배원, 초·중·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 **시청자 채널재설정 지원**

o **(단독주택)** 콜센터(124번)를 통해 **자체적으로 채널 재설정 유도**, 노인·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 가구**(약 400가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 기기 이해 및 조작 능력이 미숙한 노인·장애인의 경우 전화 안내만으로 해결 곤란

o **(공동주택)** 공시청설비를 보유한 **아파트**(29개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환경 점검** 및 **재설정 방법 사전 교육** 실시('17.1~3월)

- **사회복지시설 36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환경 점검** 및 **재설정 방법 사전 교육** 실시('17.1~3월)

※ 마을공시청 4개소는 관리주체인 KBS가 자체적으로 추진

□ **시청자 지원 체계**

o 채널 재설정 시청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방송사, TV제조사, 콜센터, 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권역별로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

o **(콜센터·지원센터 운영)** 현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4번)와 **2개**(부산·강릉) **지원센터 활용**

※ 콜센터는 3개월(5~7월), 지원센터는 지역 전파관리소 체제로 4개월(4~7월)간 활용하되,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o **(방문 기술지원반) 취약계층**(노인·장애인) **기술지원**을 위해 전파관리소, 방송사, KCA, RAPA, 지원센터 등으로 **방문 기술지원반**(7~8팀) **운영**

- 방문 기술지원반을 **4개市**(양산, 포항, 경주, 태백), **3개君**(홍천, 평창, 단양) 지역에 배치하여 **신속하게 현장 대응**(재배치 후 7일간) 추진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행자부·국토부·조직위·강원도 등,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무장애 관광도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평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강릉시(시장 최명희), 평창군(군수 심재국), 정선군(군수 전정환),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와 함께 2017년 1월 11일(수)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앞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접근성(accessibility)' 기준에 따른 대회시설(경기장, 숙박, 선수촌, 수송)을 완벽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도시'**를 창출할 예정이다.

* 장애인 편의 시설(1,163개소,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 ㅇ 민간시설 조사대상: 1,101개소
    - 음 식 점: 867개소(바닥면적 70㎡이상 300㎡ 이하의 일반음식점)/ 정선군 22개소
    - 숙박업소: 175개소(객실 20객실 이상, 30실 이하의 호텔, 콘도, 모텔)
    - 관광시설: 37개소(명승지, 국보, 사적, 박물관, 공원 등)
  - ㅇ 공중화장실: 62개소(공공시설 50개소, 민간시설 12개소)

문체부, 관계 부처, 조직위, 개최 시군, 관계 기관 공동 지원

문체부는 '15년과 '16년에 강원도(강릉, 평창, 정선)에서 사전에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시설(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1,101개 중 733개소를 선정해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62개소(공공 50개소, 민간 12개소)를 신·개축 및 새단장(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재정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 및 개최도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른 정부 부처의 협조 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평창패럴림픽의 장애인 관람과 접근성, 편의 등을 증진하기 위해 경기장 주변 주요 관광지 등의 노후화되고 불편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18억 5천만 원)를 지원했다.

또한,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디자인(Universal design)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창패럴림픽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개최도시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참가 선수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비 28억 원(139대)과 저상버스 차량구입비 18억 원(44대) 등, 총 46억 원(183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접근성 기준 및 국내 관계 법령을 반영해 대회 시설에 장애인 관람석(전체관람석 1% 이상)과 경사로, 승강기를 설치한다. 또한 숙박 부분에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언론 및 각국 대표단 등 패럴림픽 대회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72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수촌은 총 440세대 중 182세대(436베드)를 휠체어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는 민간시설(음식·숙박·관광) 733개소와 공공화장실 62개소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음식점 566개소의 장애인주차장과 경사로, 입식식탁(테이블) 등을 개선한다. 숙박시설 141개소에는 장애인주차장과 경사로는 물론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유니버설) 디자인 객실을 마련한다. 관광시설 26개소에는 장애인주차장과 안전바, 경사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62개소의 경사로와 장애인화장실, 보온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애인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신축·새단장(리모델링)된 민간시설(음식·숙박·관광)과 공공화장실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투어강원 앱' 등을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위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하고, 외국의 무장애 관광 사이트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한국관광공사 운영 국내 여행정보 앱(대한민국 구석구석 → 여행이야기 → 무장애 여행)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

조윤선 장관은 "관계 부처와 개최도시, 조직위, 한국관광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 단체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대회 이후에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회 유산(legacy)으로서 '무장애 관광도시'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접근성 개선 주요 내용
2. 접근성 개선 추진 상황
3. 접근성 개선 기관별 지원(필요예산 포함) 내역

붙임1 접근성 개선 주요내용

□ 평창 패럴림픽 접근성 개선 목표

o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접근성 기준 및 국내 관련법령에 따른 최상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으로 평창 패럴림픽 대회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문체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개최도시 합동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통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대회시설	베뉴	o 올림픽과 동일한 시설(4개 경기장·선수촌·IBC·MPC)를 사용하며, IPC의 접근성 기준과 국내 법령을 반영하여 설치 * 장애인 관람석(전체 관람석의 1% 이상),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등
	숙박	o 패밀리 호텔의 접근 가능한 객실 72실을 포함, 총 4,047실 사용
	선수촌	o 평창 선수촌만 사용하며, 휠체어 참가자를 고려하여 「총 440세대 중 182세대(436베드)」을 접근가능 객실로 확보 * IPC 요구사항 및 국내법령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설계 및 운영
	수송	o 총 1870대 중 저상버스(44대) 및 휠체어 리프트 차량(139대) 준비 * 국토부, 지자체 등 협조「저상버스 . 휠체어 리프트 차량 확보」
개최도시 접근성		o강원도, 개최도시(강릉, 평창, 정선)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1,163개소) - 민간시설 조사대상 : 1,101개소 · 음 식 점 : 889개소(바닥면적 70㎡이상, 300㎡이하의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 175개소(객실 20객실 이상, 30실 이하의 호텔, 콘도, 모텔) · 관광시설 : 37개소(명승지, 국보, 사적, 박물관, 공원 등) - 공중화장실 : 62개소(공공시설 50개소, 민간시설 12개소) o 장애인 편의 시설(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및 공공화장실) 795개소(68%) 개선 예정 - 민간시설 총 733개소(음식566, 숙박141, 관광26), 공중화장실 총 62개소(공공50, 민간12)

o 경기베뉴

베 뉴	구분	주요 편의시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관람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영구	-	-	1개	4대(곤돌라1, 리프트2, 승강기1),	-
	임시	계획 중	36석	62개	1대	15개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영구	-	-	1개	1대	1개
	임시	계획 중	45석	23개	-	6개
강릉 하키센터	영구	13면	146석	1개	4대	10개
	임시	-	-	21개	-	11개
강릉 컬링센터	영구	7면	49석	3개	2대	3개
	임시	-	-	6개	-	8개

o 대회 관련시설

베 뉴	구분	주요 편의시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관람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올림픽 플라자	영구	계획 중	351석	24개	10대	38개
	임시			24개		12개
IBC	영구	21면	-	10개	3대	18개
	임시	계획 중	-	10개	-	1개
MPC	영구	12면	-	3개	4대	6개
	임시	계획 중		8개		2개

o 패럴림픽 수송

계	세단	SUV	밴	CARGO	휠체어리프트차량	일반버스	저상버스	특장버스
1,870	172	625	99	248	139	497	44	46

* IPC 요구사항을 반영한, 접근 가능차량(휠체어리프트차량, 저상버스, 특장버스)

o 패럴림픽 숙박

구 분	계	PF Hotel	CG Hotel
합계	**72실**	44실	28실
완전 접근 가능형	**32실**	19실	13실
휠체어 친화형	**40실**	25실	15실

* 패럴림픽 호텔 14개 시설 4,047 객실 중 접근가능 요구 객실 72실

o 패럴림픽 선수촌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42-50일원(평창 선수촌)
- 규모 : 11층 8개동 440세대 2,332베드 사용(접근가능 객실 182객실 436베드)

* 국제 컨설턴트 자문내용 반영한 수정 설계디자인 IPC 제공('15.12)

□ 개최도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세부내용

o 전통음식 상품화 특구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a+b)		2016년(a)		2017년(b)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총 계	**307**	**2,066**	**77**	**420**	**230**	**1,646**
강릉시	140	970	20	100	120	870
평창군	167	1,096	57	320	110	776
정선군	-	-	-	-	-	-

o 민간시설(음식, 숙박, 관광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a+b+c)		음식(a)		숙박(b)		관광시설(c)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총 계	**733**	**5,632**	**566**	**3,962**	**141**	**1,410**	**26**	**260**
강릉시	206	1,760	100	700	80	800	26	260
평창군	518	3,809	457	3,199	61	610	-	-
정선군	9	63	9	63	-	-	-	-

o 공중화장실(공공시설 50개소, 민간시설 12개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a+b)		신·개축(a)		리모델링(b)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총 계	**62**	**7,243**	**11**	**2,163**	**51**	**5,080**
강릉시	44	4,900	5	1,000	39	3,900
평창군	14	1,943	6	1,163	8	780
정선군	4	400	-	-	4	400

* 신축·개축 : 2억원/개소, 리모델링 : 1억원/개소

o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구 분	법정대수(a)	도입대수(b)
총 계	**19**	**21**
강릉시	13	15
평창군	3	3
정선군	3	3

붙임2 접근성 개선 추진상황

※ 완료(○), 추진 중(△), 미 추진(×)

구 분	분야(개소)	점검내용	추진상황	비고
대회시설	경기장(4)	장애인주차구역, 관람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오버레이 포함)	△	조직위 ('17년말 완공)
	대회관련시설 (3)	장애인주차구역, 관람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	
	숙박(14)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승강기, 접근가능객실	△	
	수송	특장버스(46대)	△	문체부, 보훈처, 복지부
		저상버스(44대)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139대)	○	지자체
개최도시 편의시설	전통음식점(277)	경사로, 입식테이블	△	문체부 지원 (10.3억/특구단)
	음식점(566)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입식테이블	×	국비확보 필요 (50.7억)
	숙박업(141)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객실		
	관광시설(26)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안전바		
	공중화장실 (민간 12)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보온시설	×	국비확보 필요 (11.7억)
	공중화장실 (공설 50)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보온시설	△	행자부 특교세 기 교부결정 (18.5억/ 22개소) 추가국비확보 필요 (23.1억)
	교통약자 편의증진	정류장 접근성 개선	△	국토부, 강원도, 개최도시
	접근성 앱지도 (관광앱)	제작 중	△	강원도, 개최도시, 관광공사

붙임3 접근성 개선 기관별 지원(필요예산 포함) 내역

부처명 (소관부서)	지원내역	소요예산	계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 기획단)	ㅇ 강원도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음식업소 시설개선) * 경사로, 화장실, 입식테이블 (개소 당 1천만 원 한도)	'16년(2.1억) '17년(8.2억)	10.3억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ㅇ 개최공중화장실 환경개선(특교세)	'16년(18.5억) '17년(-)	18.5억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ㅇ 접근성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16년(-) '17년(-)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ㅇ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139대) ㅇ 저상버스 차량구입비(44대)	'17년(27.8억) '17년(17.6억)	45.4억
조직위 (패럴림픽통합부)	ㅇ 접근성 매뉴얼 개발 및 국제 접근성 개선 컨설팅 개최	'15년(0.3억)	0.3억
강원도 (개최시군 포함)	ㅇ 강원도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음식업소 시설개선)	'16년(4.2억) '17년(16.5억) *총사업비 20.7억 (국10.3,지방10.4)	*총사업비 157.8억 (국118.5,/지방39.3) *기 지원예산 55.5억 (국33.0/지방22.5) *총 필요예산 102.3억 (국85.5/지방16.8)
	ㅇ 민간시설(음식,숙박,관광) 개선	'17년(56.3억) (국50.7, 지방5.6)	
	ㅇ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 - (공공시설 50개) - (민간시설 12개)	'16년(26.4억) (국18.5,지방7.9) '17년(33억) (국23.1,지방9.9) *총사업비 59.4억 (국41.6,지방17.8) '17년(13억) (국11.7, 지방1.3)	
	ㅇ 장애인콜택시(21대)	'16년이전(8.4억) ('13~'15) (국4.2,지방4.2)	

파란색 : 필요예산

7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부처 합동 고병원성 AI 매몰지 현장점검

- 1.16~1.20일까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매몰지 등을 집중 점검 -

❑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합동으로 1.16일~1.20일 AI 매몰지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매몰지의 방역상 위험요소 제거, 2차적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매몰지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매몰지별 전담 공무원 지정하여 이행에 노력해 왔다.

○ 이번 정부 합동점검은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 매몰지와 프라스틱 저장조 방식이 아닌 일반 매몰지* 등 169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1 현재 매몰지 현황 : 7개 시·도, 40개 시·군, 434개소

* 일반매몰지 : 매몰 구덩이 바닥과 측면에 차수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차수막을 만든 다음 가축사체를 매몰하는 방식

○ 주요 점검 사항은 매몰지 선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①하천 등과의 적정한 이격 거리(30m이상) 준수 여부, ②매몰지 주변 잔존물 처리, ③관측정 설치 및 지하수 관정 수질 조사 여부, ④침출수와 악취 관리, ⑤침출수 수거 유공관 설치, ⑥저장조

변형·파손 여부 등 24개 항목이다.

- 매몰지 현장 점검과 더불어 관할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 지정,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등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매몰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 합동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3개 부처의 8팀 18명이 주축이 되어 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 **정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여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향후 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도 정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몰지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 환경부

환경부, 모든 롯데마트 매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 환경부-롯데마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추진, 참여기업 확산 예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마트와 충전기 설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119개)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현재 롯데마트 22개 매장에 2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나머지 97개 매장에 120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 대형마트에 급속충전기 설치되면, 전기차 소유자들은 장을 보는 시간 동안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 그동안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전국 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균형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도심 내의 주요거점에도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번 환경부와 롯데마트의 협약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롯데렌터카 사이의 전기차 렌트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협약에서는 롯데마트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 롯데그룹은 롯데렌터카에 126기(급속2기, 완속124기), 롯데마트에 24기(급속21기, 완속3기), 롯데호텔에 2기(완속), 하이마트 2기(완속)를 설치하는 등 전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자체 예산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롯데월드타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0기, 완속충전기 108기를 설치했다.

○ 환경부는 롯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등 근로자 수가 많은 대형사업장에도 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여, 롯데그룹과 같은 협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미국에서는 '직장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Workplace Charging Challenge)'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내 255개 기관 600개 사업장에 5,500기의 충전기를 설치한 바 있다.

○ 국내도 미국 사례처럼 협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직장 등 접근성이 좋은 지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롯데와의 협약을 계기로 유통매장 등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시작하는 캠페인을 계기로 국내도 해외처럼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정부도 기업들이 노력해주면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발대식.
2. 미국 직장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3. 전기차 충전기 보급실적·계획.

붙임 1 '17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발대식

□ **행사명** : 2017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발대식

□ **기간/장소** : 2017. 1. 17(화) 14:00~15:00, 롯데월드타워(잠실)

□ **주요내용**

① 2017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②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명식(환경부, 롯데마트)

③ 2017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퍼포먼스

④ 전기차 충전 시연

□ **주요인사** : 환경부 장관, 전성태 제주도 부지사,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최두환 포스코 ICT 대표,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프로그램**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3:55~14:00(5′)	• 티타임	롯데월드타워 7층
14:00~14:05(5′)	•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
14:05~14:12(7′)	• 2017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한국환경공단
14:12~14:17(5′)	• 인사말씀	환경부 장관
14:17~14:21(4′)	• 축사	제주도 부지사
14:21~14:25(4′)	• 축사	롯데마트 대표
14:26~14:35(10′)	• 업무협약서 서명식(촬영 포함)	환경부 장관, 롯데마트 대표
14:36~14:45(10′)	•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퍼포먼스(촬영 포함)	환경부 장관 등 5명
14:46~14:55(10′)	• 이동(행사장→충전기 설치장소)	지하 1층 주차장
14:55~15:00(5′)	• 전기자동차 충전 시연	

붙임 2 미국 직장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캠페인

□ 주요내용

○ 전기차 이용 불편사항 중 하나인 충전 편의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국 정부에서는 'EV Everywhere'의 일환으로 'Workplace Charging Challenge' 시행('13년)

- 참여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통해 직원들이 전기차 충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향후 10년 내에 플러그인 전기자동차를 가솔린 자동차와 같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시행

○ '18년까지 500개의 기업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

○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장 내 충전인프라를 최소 1개 이상 사업장에 설치

- 충전인프라는 사업장 내 인구밀도가 높은 대형건물 주변에 설치
- 초기 13개 대기업, 8개 유관기관으로 시작해 지속적인 확산 노력

○ 캠페인 참여로 인한 혜택

- 건물의 LEED* 인증 획득 및 지역사회 환경보호 공헌

  *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로 Green Vehicle 항목 1점 가점 부여

-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 절약 효과
-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해 참여기업의 성과 인정
- 전기차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기술정보 제공

□ 실제 사례

○ 미국 구글 캠퍼스

- 3,000여대 분 이상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마련
- 수백대 전기자동차 셰어링 서비스 무상 운영

○ 미국 아마존 본사

- 220대 전기자동차 운영(총 2,200명 근무), 완속충전기 27기 설치
- 충전서비스업체 위탁 운영 중이며, 직원들에게 무료로 전기 제공

붙임 3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실적 · 계획

□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직장**(녹색기업 등),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도심권**(마트·정비센터)에 **집중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문제 해소

※ '16→'17(누적,기) : 급속 750 → 2,610, 완속 9,258 → 20,273

- 충전기 이용이 많은 지점은 **2기 이상씩 설치**하고, 한 지점에 **급속충전기 5기 이상을 집중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구축**

※ 집중충전소 설치계획(~'17.2) : 서울 2곳, 제주 4곳

<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실적·계획 >

구분	합 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계	환경부	민간[2]	계	환경부[1]	민간[2]
합 계	**22,883**	**2,610**	**1,201**	**1,409**	**20,273**	**17,900**	**2,373**
'16년 까지	**10,008**	**750**	491	259	**9,258**	8,385	873
'17년 계획	**12,875**	**1,860**	710	1,150	**11,015**	9,515	1,500

1) '16년까지 주로 개인용으로 지원, '17년부터는 공용으로 지원대상 확산

2) 한국전력, 민간충전사업자 등의 설치계획으로서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크게 개선

- 2015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인증 사회적기업 1,460개를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출**(4월, 10월)하는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실적을 대상으로 함

□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1조 9,677억원**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하였고, **전체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15.1% 개선**('14년: -113,105백만원 → '15년: -96,000백만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이익 발생기업수도** 356개소(24.4%)로 전년도 254개소(20.9%)에 비해 **102개가 증가**(3.5%p)하였고,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도 **29.2%로 크게 개선**('14년: -92백만원 → '15년: -65백만원)되었다.

○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을 나타내는 **영업외 수익의 기업당 평균액은** 120백만원으로 전년도 137백만원에 비해 **17백만원(12.4%) 감소**하였다.

- 특히, **영업외 이익 중 기업당 정부지원액**은 **'15년도 108**백만원으로 전년도 115백만원에 비해 **7백만원(21.7%)이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47,30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76백만원 증가(88.3%)하였고, **기업당 평균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1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순이익 발생기업수**도 989개소(67.7%)로 전년에 비해 **195개소가 증가(3.1%p)**하였다.

□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 성과도 향상**되었다.

○ **전체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은 **1,45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천원(6.5%) 상승**하였고,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1,319천원**으로 전년대비 **149천원(12.7%) 증가**하였다.

○ 또한, 전체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35.6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감소**하였고, **취약계층**도 전년도에 비해 **0.1시간 감소**하였다.

□ 한편, '16.12월말 현재 **1,713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중**으로, 사회적기업 **전체 생존율은 89.9%**(1,713개소/1,905개소)이며, **정부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86.5%**이다.

*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 60.1%, 3년 생존율 38.2%(**'15년**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국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 "사회적기업이 **직접지원 위주의 정부지원 우산**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아울러 **청년이나 벤처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사회적기업 주요 경제적 · 사회적 성과분석(2014~2015)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2014	2015
1,228개소	1,460개소

1.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매 출 액			기업당 평균 매출액
	계	민간매출	공공매출	
2014	1,465,156	930,411	534,729	1,203
2015	1,967,742	1,156,229	811,513	1,347

2. 이익 발생 현황

구 분		기 업 수	정부 지원 사회적기업	정부 미지원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발생 수	2014	254개소/1,218개소(20.9%)	197개소	57개소
	2015	356개소/1,460개소(24.4%)	237개소	119개소
순이익 발생 수	2014	794개소/1,206개소(65.8%)	729개소	65개소
	2015	989개소/1,460개소(67.7%)	845개소	144개소

3. 영업이익 및 영업외 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당기 순이익
		전체	기업평균 정부지원금	
2014	-113,105 (-92)	166,128 (137)	115	25,126 (20)
2015	-96,000 (-65)	175,240 (120)	108	47,302 (32)

※ ( )는 기업당 평균

4.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원, 시간)

구분		2013	2014	2015
평균임금	전체	1,278	1,362	1,451
	취약계층	1,104	1,170	1,319
	일반인	1,531	1,647	1,786
평균근로시간	전체	36.2	35.8	35.6
	취약계층	35.8	35.2	35.1
	일반인	36.8	36.6	36.4

10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프로그램과 함께 설 명절 즐겨요!”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 명절 계기 가족프로그램 진행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온 국민이 설 명절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또한, 명절 먹거리를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자는 내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 캠페인**(홍보운동)도 전개한다.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 설 명절을 맞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진행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총 59개**로,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떡국, 만두 등 명절음식을 만들거나 전통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다수다.

○ 경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통해 익숙해진 **‘풍등’을 함께 만들고 가족의 새해 소망을 담아 날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서울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는 구로아트밸리에서 **‘흙으로 빚는 우리가족 이야기’**를 진행하며, 도봉구 통합센터는 덕성여대 조리실습실을 활용해 **전통 한과**를 만든다.

○ 이밖에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국인가족 페스티벌(축제)’**, 충남 아산시 통합센터의 **‘베트남 설맞이 기념행사 - 뗏’**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명절 가사노동을 온 가족이 나누고, 명절에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11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2021년까지 1조 2백억원 국가지원 포함, 총 4조 9천억원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6.12월)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 (**도시재생 2차 사업지구 17곳, 계획수립안 심의**) **도시경제기반형**: 서울·대구 2곳, **근린재생형**: 부산영도·울산중·충주·전주·안동·김해·서울용산·서울구로·부산중·부산서·부산강서·인천강화·부천·춘천·나주 15곳
(**도시재생선도지역 1곳, 계획변경안 심의**) **도시경제기반형**: 청주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6개의 관계부처 장 및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계획 >

1. (**서울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을 활용한 **R&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新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 (**대구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하여 서대구에 **경제·교통·문화 Hub**를 구축한다.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연구·업무 지원시설 건립**과 민간참여 사업인 **서대구산업단지 복합건축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3 (**부산 영도구: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시청과 상권의 이동으로 쇠퇴한 지역(봉래동)에 **'문화·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목도 노포 전수방*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 브랜드화 및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 산업 재생방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 상권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하여 과거 영도의 경제 중심지인 목도공설시장의 노포(老鋪) 전통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공간

4 (**울산 중구: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산업 침체 등으로 쇠퇴한 중심시가지(중앙동)에 **'원도심 강·소(强·小) 경제'를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 인재 기반 창조경제 구축**사업, **상권 인프라 확장**,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도심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다.

5 (**충북 충주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쇠퇴한 지역(성서동)에 **'청년·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 **도시재생·문화·창업 앵커 조성,** 대상지 내 유휴·공공 공간을 활용한 **청년가게 등을 조성**한다.

6 (**전북 전주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 외연이 성장하여 쇠퇴한 지역(풍남동)에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 **특화가로 정비** 및 **문화창의센터 조성,**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관광 루트도 함께 조성**한다.

7 (**경북 안동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주요 행정기관 등의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중구동)에 **'안동웅부(安東雄府)* 재창조'**를 비전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고려 공민왕이 안동에 머무르며 '영남의 으뜸가는 곳'이라는 뜻으로 표현

○ **거점 마련**과 **상업가로 활성화,**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거주 환경 기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한다.

8 (**경남 김해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쇠퇴한 지역(동상동)에 '**가야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 역사문화특화를 위한 **보행 공간 구축,** 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9 (**서울 용산구: 일반 근린재생형**) 건축의 제한 등으로 쇠퇴한 지역(용산2가동)에 '**문화예술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녹색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 지역 정비,** 문화예술·청년창업을 위한 **창의 공간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10 (**서울 구로구: 일반 근린재생형**) 중국동포 밀집 등으로 쇠퇴한 지역(가리봉동)에 '**G-밸리(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지역 자산과 추억을 담은 **문화경제재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11 (**부산 중구: 일반 근린재생형**) 도심 내 급경사 등으로 쇠퇴한 지역(보수동)에 '**책방골목**'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 **생활 기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12 (**부산 서구: 일반 근린재생형**) 일본인 공동묘지 등으로 쇠퇴한 지역(아미동)에 '**비석문화마을**'을 비전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마을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유동 인구를 활성화하며 인구 유입의 **공유경제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13 (**부산 강서구: 일반 근린재생형**) GB 및 강서신도시 무산 등으로 쇠퇴한

지역(대저1동)에 '**생태·음악**'을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마을공동체 조성,** 음악·생태·토마토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를 재생할 것이다.

⑭ (**인천 강화군: 일반 근린재생형**) 방직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면서 쇠퇴한 지역(강화읍)에 '**역사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꾀한다.

○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왕의길** 등 **역사 자원의 보행 연계, 강화 역사문화 가꾸기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⑮ (**경기 부천시: 일반 근린재생형**) 뉴타운 해제 등으로 쇠퇴한 지역(소사본동)에 '**성주산이 품은 활기찬 소사마을**'을 비전삼아 재생할 계획이다.

○ **소사종합시장 환경 개선 및 마을기업 육성,**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소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⑯ (**강원 춘천시: 일반 근린재생형**) 캠프페이지가 이전하면서 쇠퇴한 지역(근화동)에 **소양강과 번개시장**을 활용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역사문화가로를 만들고,** 전통시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번개시장 문화장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⑰ (**전남 나주시: 일반 근린재생형**) 혁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쇠퇴한 지역(근남동)에 '**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 **핵심 거점 공간 개발,**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하는 **어메니티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 역사문화사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⑱ (**충북 청주시 : 도시경제 기반형**) 구 연초제조창 부지의 **민간참여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복합공영주차장**건립사업을 추가하고,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도입시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계획변경 사항에 포함되었다.

< 성과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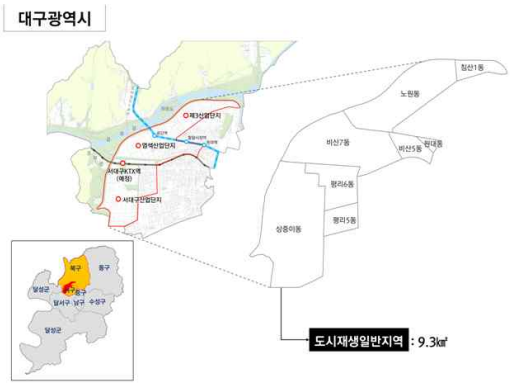
□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지난 4월에 도입된 **관문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지역**이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부처·민간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국토부**는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 : 사업의 전 과정을 주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아울러 “이번 특위에 상정되지 못한 2차 도시재생지구 **16곳**도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든 시점이므로 **선도지역**의 **성과를 중점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금번 승인된 도시재생일반지역 및 선도지역(청주) 위치도

경제기반형 | 서울 창동·상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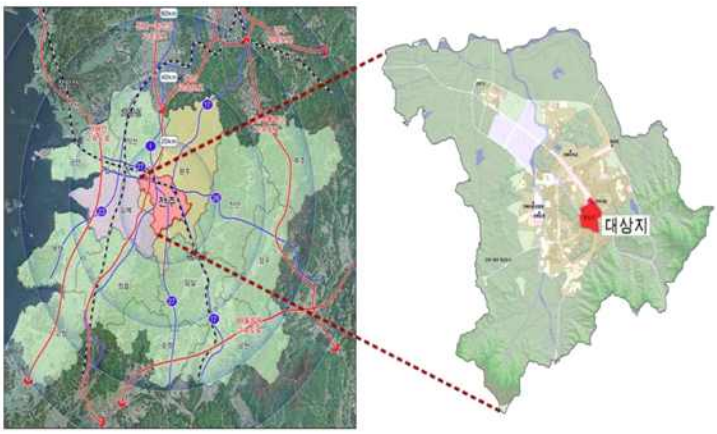


경제기반형 | 대구 서·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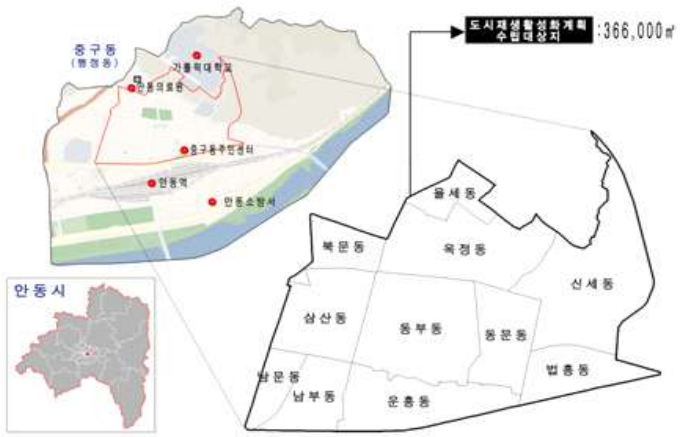
중심시가지형 | 부산 영도구

중심시가지형 | 울산 중구

중심시가지형 | 충북 충주시



중심시가지형 | 전북 전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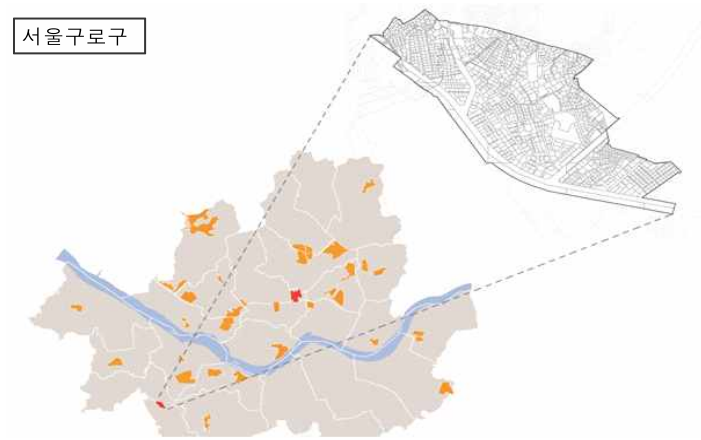
중심시가지형 | 경북 안동시

중심시가지형 | 경남 김해시

서울 용산구

일반근린형 | 서울 용산구

서울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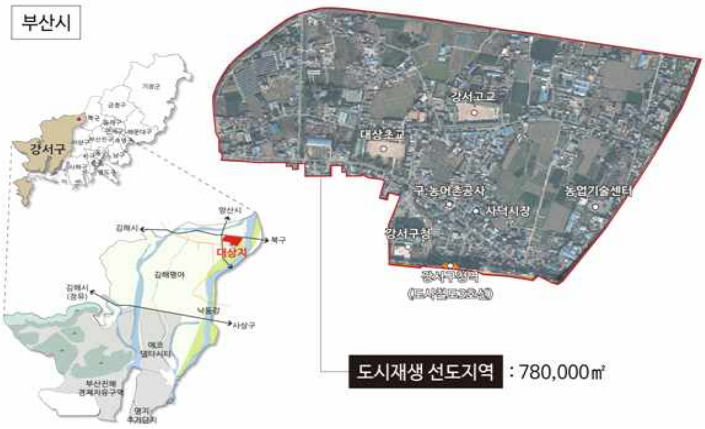
일반근린형 | 서울 구로구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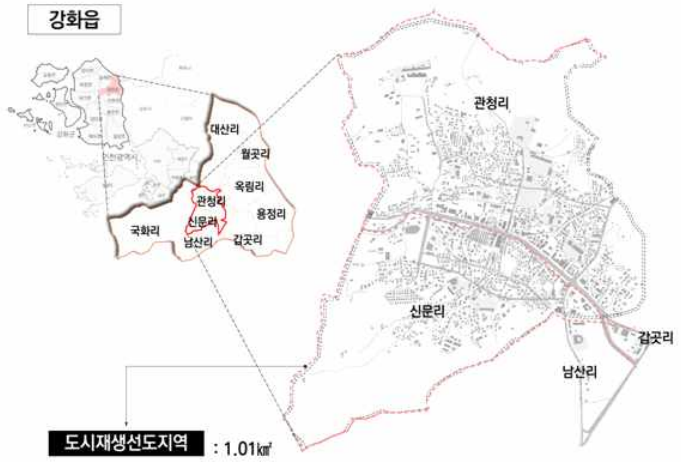
일반근린형 |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일반근린형 | 부산 서구



일반근린형 | 부산 강서구



일반근린형 | 인천 강화군

일반근린형 | 경기 부천시

일반근린형 | 강원 춘천시

12 해양수산부

설 명절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 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수상품을 엄선하여 수록한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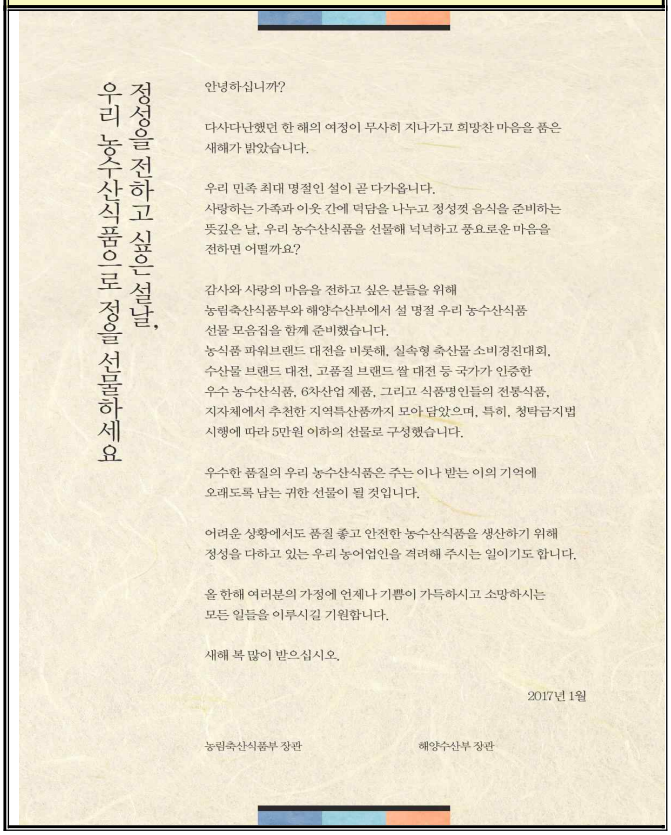
이번 모음집에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수상 제품, 품목별 품평회(수산물, 과일, 쌀, 축산물, 식품, 전통주) 수상 제품, 식품명인이 만든 제품, 6차 산업 관련 우수상품, 지자체 추천 상품 등 300여 품목의 농수산식품이 수록되었다. 특히 이번에 펴낸 선물 모음집에서는「청탁금지법」상 선물 금액 상한을 고려하여 5만원 미만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실속형 상품을 주로 소개하였다.

책자 발간에 더하여,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의 농수산식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 명절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을 앞두고 우수한 우리 농수산제품을 소개하여 설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이 활용하시게 하고, 우리 농어업인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분들이 우리 농수산제품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 선물 모음집은 '설 선물 모음 누리집'(www.holidaygift.co.kr)과 네이버 등 주요 검색사이트에 있는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배너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다.

참고 **우리 농수산식품 모임집 표시 및 장관 서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 표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